

■ 범여권 단일 정당 국민경선 5대 쟁점

黨心-民心 비율 이해따라 '제각각'

예비경선, 군소후보 컷오프 여부 논란

모바일 투표·지방순회 순서 입장차 커

4일 '단일정당·단일후보' 원칙에 합의한 범여 대선 예비주자 6인이 5일 오전 각각의 대리인을 내세워 경선방식과 규칙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한 것이다. 이들은 2002년 민주당 국민경선의 극적 흥행효과를 되살리는 차원에서 오픈프라이머리 형식으로 경선을 치르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동상이몽'이 나타난다.

1 민심-당심 반영 비율은?

여론 지지도가 높지만 범여권 내 조직기반이 약한 손학규 전 지사는 '민심'의 반영 비율을 가급적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친노진영 조직 일부를 흡수한 이해한 전 총리는 국민경선 참여의 폭을 가급적 넓히면서도 '당심'도 기술적으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동영 전 의장은 국민경선 참여규모를 최대한 늘리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여론조사 결과 반영에는 부정적이다.

2 군소후보 컷오프 될까?

본 경선에 참여시킬 후보를 몇 명으로 압축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지금처럼 20명에 육박하는 후보 규모로는 토론회 등 경선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경선 실시시기도 논의대상이다. 9월 초 본경선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때 현재 8월 중순과 8월 말 두 시기가 거론되고 있다.

본경선에 앞서 후보 간 정책토론회를 실시할 경우에는 8월 중순 예비경선을 해야 하고, 정책토론회를 생략할 경우 8월 말 컷오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3 모바일 투표 허용할까?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투표 실시 여부도 쟁점이다. 일단 주자들은 기술적 안정성만 확보된다면 가급적 모바일 투표를 해 이

를 경선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에 따라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된다. 모바일 투표는 짧은 층과 화이트 칼라, 지식인 계층이 선호하는 투표행태다. 손 전 지사와 정 전 의장, 이 전 총리는 찬성 기조를 보이면서 기술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 지방순회 어디부터?

초반부 경선 결과가 이후 경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선 시 지방순회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후보자 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빅3' 중 손 전 지사는 경기, 정 전 의장은 전북, 이 전 총리는 충청에 연고

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치열한 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 지역편차 해소 방안은?

지역별 인구규모 및 투표율 편차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일례로 영남의 경우 호남에 비해 인구가 많지만 투표율은 호남에서 높게 나올 경우 '간극'을 어떤 식으로 좁힐 것인가 하는 문제다. 지역별 인구규모와 투표율을 적절히 혼합해 가중치를 두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지만 주자별로 지역에 따라 지지율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들의 속내가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최성 의원 출판기념회에 범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왼쪽부터 최성 의원, 박지원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12일 창당준비위...25일 우리당, 신당과 합당

범여권 '창당 로드맵' 확정

열린우리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범여권 대통합파가 오는 25일 제 세력을 한데 묶어 신당을 창당하는 내용의 '범여권 창당 로드맵'을 마련했다.

대통합파는 우리당의 경우 신당 창당 직전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천년민주당 방식의 신설합당을 결의함으로써 당 전체가 신당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통합파 핵심 관계자는 5일 "25일 신당 창당을 목표로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우리당 지도부와 시민사회 세력과의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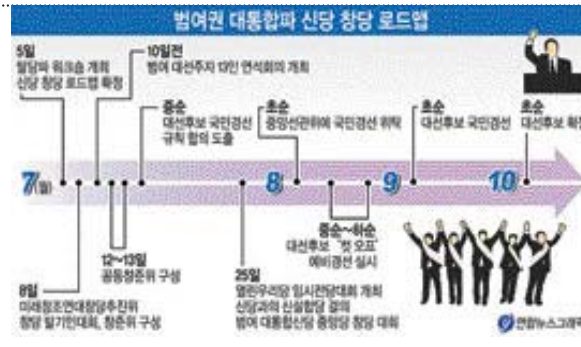
대통합파는 오는 8일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시민사회 세력인 '미래창조연대 창당추진위원회'가 창당 발기인 대

회를 개최, 창당준비위를 구성하면 12일에 우리당 탈당그룹과 손학규 전 경기지사 측 선진평화연대, 중도통합민주당 통합파와 의원이 이에 가세, 공동창당준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러 25일 오전 우리당이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 신당과 신설합당을 결의한 뒤 오후 범여권 대통합 신당을 창당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우리당내 친노(親盧) 사수파가 임시 전대 개최를 물리적으로 저지할 경우에는 대통합파가 집단탈당하는 형식으로 신당에 참여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합파 비례대표에 대해 출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게 대통합파의 판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당은 친노 일부 세력만이 잔존하는 정당으로 바뀌게 되며 범여권의 대선주자 경선은 대통합파



와 중도통합민주당, 잔존 우리당의 3개 리그로 치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통합파는 또 대선주자 간 국민경선 규칙 협의는 신당 창당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해 이달 중순에 합의를 하고 신당 창당 즉시 이를 당헌에 규정해 국민경선관리위를 발족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달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경선을 위탁하고 내달 말까지 난립한 대선주자를 소수로 거르는 '컷오프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9월 초 본 경선을 거쳐 10월 초 대선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F1대회 '빨간불'

특별법 처리 9월 국회로 넘어가

정부 간척지 사용 승낙 미적미적

전남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 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F1 대회가 국회의 정쟁과 정부의 비협조로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발전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서남권개발을 위한 서남권특별법도 6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더 이상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우선 F1 특별법(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간 정쟁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전남도에서는 은근히 7월 임시국회를 기대했으나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로스쿨법이 처리되면서 7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돼 F1 특별법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서나 심의될 예정이다.

F1대회를 법률적으로 지원할 특별법이 전남도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물론, 9월 정기국회로 물건너가면서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정부에 F1 대회 경주장 건설을 위해 정부에 간척지 우선 사용 승낙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국무조정실과 농림부가 F1 경주장

건설을 위한 간척지 우선 사용 요청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전남도의 간척지 우선 사용 요청 문제를 국무조정실에 넘겼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무조정실은 간척지 문제는 농림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F1 경주장 건설에 필요한 간척지 우선 사용 문제는 부처 간의 팽팽 게임으로 단시일 내의 결과 도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F1 특별법이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고 F1 경주장 건설에 필요한 간척지 사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F1 대회 개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시작부터 암초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이합집산에만 골몰하고 있어 F1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F1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간척지 우선 사용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 줘야 한다"며 "특히, 정치권에서 전남의 최대 현안 사업인 F1 대회 개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전당 문광부 설계 수용 안된다"

동구 비대위·광주 예총, 문화수도 연석회의 합의안 반발

문화중심도시조성 동구 비상대책위원회(동구 비대위)와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광주시지회(광주 예총)가 5일 각 성명을 통해, 정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안을 수용키로 했다는 '광주문화도시 연석회의'의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특히 연석회의의 참가 단체(총 9개)들이 대부분 환경을 강조하거나 도심공동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체들이어서 자신들과 견해 차이가 컸으며, 이미 연석회의를 탈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광주문화도시 연석회의는 4일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과 관련해 문광부의 설계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달키로 하는 등 주

요 쟁점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구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연석회의의 참가단체들은 문화전당이 들어서는 동구에 연고가 없거나 문화전당 랜드마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단체이며, 광주지역 230개 시민사회단체 중 비슷한 의견을 가진 단체들로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연석회의의 의견을 광주 시민사회단체 전체의 뜻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광주 예총 관계자는 "예총은 연석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천석 규모의 전문공연장을 문화전당에 포함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계절 양잔디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암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연락처	010-9700-1111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암평동 111-1
운영시간	월요일 휴무, 화요일~일요일 08:00~18:00
비고	골프장 이용 시 1인당 1시간 무료 골프차를 제공합니다.